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2월 24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월 24일(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2.23.(화)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
담당과장	정경록 과장(044-203-4870)	담 당 자	유형규 사무관(044-203-4874)

산업부, 16개국 공관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 개최

-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해외 주재 상무관간 유기적 협력 강화하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글로벌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2월24일(수)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개최함. (총 16개국 상무관 참석)

【 회의 개요 】

- **일 시** : '21.2.24(수), (1차) 09:00 ~ 10:00 , (2차) 17:00 ~ 18:00
- **장 소** : 서울(화상회의)
- **참 석** :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통상법무기획과장 등
  (상무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EU, 영국, 사우디, WTO (총 16개 공관)

□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현재 총 27개 국가로부터 221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부과 받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반덤핑 464건, 상계관세 31건의 조치를 부과 받은바, 무역구제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업종별 건수 : 철강·금속(103건), 화학(49건), 플라스틱·고무(22건), 섬유(15건), 전자전기(8건) 등

* 조치별 건수 : 반덤핑 167건(75.6%), 상계관세 10건(4.5%), 세이프가드 44건(19.9%)

구분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합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철강·금속	67	14	8	1	7	6	103
화학	29	12	0	0	3	5	49
플라스틱·고무	15	2	0	1	2	2	22
섬유	10	1	0	0	2	2	15
전자전기	5	0	0	0	3	0	8
기타	8	4	0	0	5	7	24
합계	134	33	8	2	22	22	221
	167(75.6%)		10(4.5%)		44(19.9%)		

○ 또한, 과거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사용했었으나, 최근 개도국들도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도 대기업 생산 품목에서 중소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업계와의 민관 협력,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외국 무역구제 조치 대응을 지원해 왔으며, 무역구제 조치 해제·완화를 위해 외국 무역구제 당국과의 양자 협의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음.

○ 이와 함께, 효과적인 무역구제 대응을 위해 해외 현지에서의 면밀한 동향 파악을 통한 사전 대응 또한 중요한바, 금번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현지의 무역구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본부와 해외 현지 간 유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함.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한 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면 누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 "특히, 코로나 19 지속, 미·중 통상갈등 심화, WTO 다자체제 복원 지연 등으로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 활용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 및 해외 현지에서 모두 예의 주시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언급함.

○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들은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현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기업들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계기로 본부와 해외 주재 상무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유형규 사무관(☎ 044-203-487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